

與野, '尹 탄핵' 두고 장외투쟁... 정치적 혼란에 민생은 뒷전

與, 장외투쟁 앞기로 방침 정했지만 탄원서, 릴레이 시위 등 '사실상' 투쟁 野, 선고일까지 국회~광화문 행진 대검 찾아 즉시항고 않은 것 규탄 추경편성 등 국가주요 현안 합의 없이 탄핵정국 앞두고 진영결집에 매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임박하자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격해지면서 민생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사실상 현재 앞 '거리 투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장외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별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현재에 의원 80여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의 숫자도 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2차 탄원서엔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욱 의원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릴레이 연좌 시위를 하고 있다.

명해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이 늘었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 13일부터 5명씩 조를 이뤄 현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 의원과 생각이 크게 다른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이 있고 개별 의원은 의원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野 대검찰청 찾아檢에 '즉시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이날 현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집회 미신고에 따른 탄핵 반대 촉구 충돌 우려로 팻말 시위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선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며 "검찰은 오늘 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즉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현안 논의는 안갯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이 온통 해당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자고 입을 모은 것과 달리 탄핵 정국을 앞두고 진영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고 일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헌재, 검사 3인 탄핵기각...尹 선고는 고심

전원일치로 결정... 즉시 직무복귀尹 탄핵심판, 오는 17일·21일 전방 안전 이유로 전일·당일 공지 예측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뉴스

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가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레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속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 공지할 수 있다는 이

야기도 나온다. 헌재 현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연금특위 구성, 문구 하나로 불발"

'합의처리' 문구 포함 여부 두고 이견 우원식 "여야 합의 진통... 매우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개정안은 포함됐지만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흘 전에 '13일에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를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결의안 문구 하나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여야 합의와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쟁점 사항이었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래서 오늘 상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겨냥해 "국민들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협의해왔다. 하지만 막판까지 '합의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한편 우 의장은 정부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

與, 崔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건의 계획

>> 1면 '상법개정안 국회통과...'서 계속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선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허정운·박태홍 기자 bada@